



Read the full book on: [10.1787/soc\\_glance-2014-en](http://10.1787/soc_glance-2014-en)

## 2014 년도 사회부문 개요 OECD 사회지표

### 국어 개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 년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소득손실이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사회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역량은 긴축재정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문 지출의 삭감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위험성을 동반하며, 미래에 관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OECD 회원국은 잘 짜여진 정책과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자원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당면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최악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주요 이머징국가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머징국가들의 사회보호장치가 "위기방지"의 기능을 가지도록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OECD 회원국의 경험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위기

2007-2008 년의 전세계 금융격변은 경제적·재정적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였다. 최장기간 동안에 최악의 경제둔화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국민들의 일자리 전망, 소득, 삶의 수준 등에 커다란 결정적 영향을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4,800 만명 사람들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7 년 9 월보다 1,500 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직장에서의 수입이 없는 가구원의 수치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청년들과 자녀가 있는 가족이 특히 그러했다.

### 다년간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후유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사회적 지원에 관련된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성이 추락했다. 또한 금융위기가 사람들의 미래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징후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금융위기의 사회적 후유증의 일부로서 가족형성, 출산 및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장기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임신률은 금융위기의 시작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적 및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구의 경우에도 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 가구의 복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수치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질병을 포함한 일련의 건강적 문제의 발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미래의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투자

단기적인 절감이 미래의 훨씬 높은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정부는 투자유형의 기금적립을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보건지출에 있어서 현재의 절감이 미래의 보건진료비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품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고, 의무교육 졸업(중퇴)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지금 당장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하지만 사회적 투자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빈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복원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부합하도록 재정긴축 조치의 일정과 내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들의 배분적 영향은 계층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중세보다는 정부지출의 감축에 더 고통 받을 수 있다.

---

### 실업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

---

일자리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실업급여, 사회부조,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회복의 속도와 궤를 같이해야만 이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들이나 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실업지원을 소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목표로 설정된 사회안전망 급여의 확충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주택지원급여와 자녀가족수당급여와 같은 사회복지의 이전소득은 일자리를 가진 가난한 가족이나 편부모 가족에게 때로는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괄적인 삭감은 피해야 한다.

---

### 지출절감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취약층을 보호하는 목표설정

---

더욱 효과적인 목표설정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보건제도개혁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저해하는 어긋난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설정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일자리를 시작할 예정인 실업자들은 복지급여에서 봉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오히려 소득이 줄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노력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자체역량을 부양 및 보조(대체는 아님)하기 위한 정부지원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비록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의 활성화에 높은 지출을 동반하더라도 이러한 정책방향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된다. 노동시장활성화와 취업후 지원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직장을 가지지 못한 가구가 다수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책노력은 노동시장환경이 개선되면, 이에 대한 혜택을 이러한 가구들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장관련 지원과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최대한 효과적이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개별 구직자에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없는 배우자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 향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계획 마련 필요

---

사회정책의 "위기방지" 역할을 확보하고 경제주기에 부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근의 경제침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넘어서는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활황에는 절감을 통해 향후의 경제불황의 비용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출부문은 노동시장환경과 더욱 밀접히 연계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회복기 동안에는 복지급여지출을 상당 부분 삭감하고 복지급여의 자원을 노동시장 활성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수익부문은 세무기준의 확대, 근로소득세 의존도 감소, 소득불균형 증가에 기여하는 세금체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정부는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연금분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래의 은퇴자 중의 일부는 근로연령 기간 동안에 실업의 상태가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소득불안정성

의 위험이 더욱 크게 된다. 보건분야의 경우, 불필요한 서비스의 제거와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조치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삭감보다 선호되는 방안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doi: 10.1787/soc\_glance-2014-en